


정책제언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하천관리 일원화를 위해

 강 부 식 | 단국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2022년 1월1일 국토교통부에 남아있던 하천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되며 하천관리일원화가 본격 시행됐다. 이로써 통합물관리가 다시 한번 진일보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정부의 물관리 조직을 환경부로 일원화함으로써 수량과 수질을 아우르는 유기적인 정책 추진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는 단순히 조직과 기능의 이관을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시점으로, 필자는 성공적인 하천관리 일원화를 위한 몇 가지 사항을 제언코자 한다.

우선, 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관리 기술의 고도화가 선행돼야 한다. AI(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물관리 기술을 더욱 첨단화할 필요가 있다.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모니터링, AI를 통한 빅데이터 분석 등 댐에 도입되기 시작한 스마트기술을 하천시설까지 확대해 한국수자원공사 시설물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댐과 하천을 포함한 유역 단위의 플랫폼을 구축해 홍수피해를 예방하는 등 물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하천관리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현재 국가하천 3603km은 국가가, 지방하천과 소하천 6만2040km는 지자체가 관리 중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물관리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반면,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대부분을 담당하는 지자체의 인력과 전문성, 예산 등에 대한 한계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부의 관리영역을 확대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댐 하류, 본류와 지류 합류부 등 취약구간에 대해서는 물분야 전문기관의 기술지원 등 역할 부여를 통해 하천관리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하천관리에 있어서 지자체를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지자체의 인력과 전문성 부족 문제를 극복하고, 지역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해 주민들이 직접 사업계획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또는 유역물관리위원회 내에 유역의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끝으로 문화와 생태, 관광이 어우러지는 도심하천의 명품화를 추진해야 한다. 하천 주변이 탄소흡수원 기능을 하도록 자연성을 회복하고,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한 수상 복합공간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하천의 가치를 제고해야 한다. 더불어 스마트제방, 천변저류지 등 분산형 홍수관리 시설을 설치해 이상기후에도 안전한 도심하천을 구축한다면 국민과 지역이 공감할 수 있는 무한한 가치의 명품하천으로 거듭날 것이다.

하천관리 일원화로 통합물관리를 향해 한 걸음 더 내디뎠지만 농업용저수지, 소하천, 발전용댐의 유기적인 통합관리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나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협력해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마침내 통합물관리를 통해 국민의 물복지 향상이라는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고 했다.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하천관리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출처:머니투데이 기고 \_ 강부식 단국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정부동향

행정안전부

## 주민이 직접 조례 제·개정 청구,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주민참여 온라인플랫폼, '주민이(e)직접' 2.8.(화) 서비스 개시 -

-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는 주민참여 온라인플랫폼 '주민e직접'을 공동으로 구축하여 2월 8일(화)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 '주민e직접'은 그동안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처리한 주민직접 참여제도를 PC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참여 하는 플랫폼이다.
  - 이 플랫폼에서는 주민조례, 주민투표, 주민소환을 청구하거나 청구건에 대한 전자서명이 가능하고, 각종 증명서 발급과 결과조회도 할 수 있다.
  - 또한, 전자서명에 간편인증을 도입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하여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의 제고로 주민의 참여기회가 확대된다.
- '주민e직접'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약칭 : 주민조례발안법)의 시행에 맞춰 본격 운영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공동으로 개통식을 개최했다.
  - 개통식에는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과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 시장과 함께,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의 주민, 주민자치위원, 자치단체 관계자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 개통식에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례 청구 주민들과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온·오프라인상으로 청취하는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
- 행정안전부는 '주민e직접' 플랫폼 개통으로 주민은 더 편리하게 참여하고, 자치단체 담당자의 수작업 업무를 자동화로 전환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이 향상되어 대민서비스 처리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통일부

## 지원은 더 넓게, 보호는 더 두텁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가 개선됩니다.

-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
  - 이번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은 2021년 8월 17일에 공포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자, 정착지원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개선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 \* 「북한이탈주민법」 개정 주요내용(△제17조의5 △'21.8.17 공포, '22.2.18 시행) : '모범사업주' 관련 △요건 규정이 기존 시행령(제35조의5)에서 법률로 상향되었으며 △요건 내용도 연평균 탈북민 고용 5명에서 3명으로 완화되고, △공공기관의 '모범사업주' 생산품 우선구매 노력 의무가 신설
  - 동 시행령 개정안은 오늘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으며, 향후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이번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은 ① '모범사업주'의 요건을 정비하고 ② 미래행복통장의 가입기간 예외사유를 확대하며 ③ 민감정보 수집·처리의 법령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①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탈북민 고용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를 '모범사업주'로 지정하고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는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제35조의5)에서 '모범 사업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으로 이 요건의 내용이 완화되어(연평균 탈북민 고용 5명→3명), 법률로 상향 규정되었다.
  - ② 미래행복통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저축하는 경우에 정부가 저축한 금액만큼을 1:1로 매칭 지원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제도이다..

- 기존에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은 미래행복통장의 가입 기간을 거주지보호기간인 5년 이내로 제한하면서, 출산과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서만 거주지 보호기간 이후 2년까지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었으나,
- 경제활동이 불가피하게 어려운 다른 사유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입 기간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사유로 ‘장애’와 ‘학업 수행’도 추가로 포함하였다.
- ③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법」 제22조에 근거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조사항목에는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상태, 의료지원 현황 등이 포함되는데, 최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정책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등 민감정보 수집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민감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였다.

보건복지부

##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지자체 중심의 노후준비 지원 체계 구축 방향 모색

- 보건복지부는 2월 10일(목) 오후 2시에 2022년 제1차 국가노후준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국민들의 노후준비 전달체계를 지자체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현재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중앙(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을 통해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분야 진단 및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등 노후준비서비스를 지원 중이나,
  - 서비스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통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중심의 전달체계로 변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이를 위해, 작년 12월에는 '노후준비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자체가 광역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운영 권한을 가지고, 지자체 차원의 노후준비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노후준비지원법 개정에 따라 향후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한편, 지자체 차원에서 적용 가능한 노후준비 지원 모델 개발을 위해 진행하였던 정책연구 결과를 공유하였다.
  - 또한, 현재 노후준비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에서도 2022년도 노후준비서비스 사업 계획을 공유하면서, 지자체가 참여하는 노후준비 체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정책브리프

# 재정분권 1단계 전환사업의 재정책임성 측면에서의 변화

-공무원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김 성 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 재정분권 기본가치로서의 재정 책임성

### ◆ 지방분권의 실현은 재정분권

-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 그리고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지방분권을 실현시키는 것이 바로 재정분권이라고 할 수 있음
- 재정분권은 재정과 관련된 의사결정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 때 재정분권은 재정 자율성과 재정 책임성이라는 두가지 핵심가치에 기반하고 있음
  - 또한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기존에 중앙정부가 제공하던 공공서비스를 지방으로 이양하게 됨

### ◆ 지속적 관심과 관리의 대상 재정책임성

-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국고보조사업들이 지자체의 자체사업화 되면서 사업의 조정과 운영 등에 있어서 지방의 자율성이 제고될 것임은 추측 가능함
  - 이와 동시에 예산의 계획적 집행이나 효율적 집행노력, 성과창출 등과 같은 책임성 문제는 지속적인 관심 및 관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이번 호에서는 재정분권 1단계 전환사업 즉,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들이 이양 이전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재정책임성 측면에서 간단히 제시해보고자 함

## ○ 재정 책임성 측면에서 재정분권 1단계 전환사업의 변화 인식조사 결과

### ◆ 공무원 인식조사의 개요 및 재정책임성 측정항목

- 재정분권 1단계 전환사업에 대해 재정 책임성 측면에서의 변화를 탐색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공무원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조사대상 :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전환사업 담당 공무원
  - 조사기간 : 2021년 9월7일 ~ 27일(3주)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사이트를 통한 Web Survey와 행정업무망을 통한 설문지 직접 제출방식 병행
  - 조사결과 : 총 154명 응답
- 본 조사에서는 재정의 책임성 측정항목으로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의 관심도 향상, 지방재정 대응력 증대(환경변화 대응), 재정건전성 제고(안정적 예산확보 및 예산 낭비 방지), 지역주민의 만족도, 전환사업의 성과평가 문항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인식조사 결과(1):지자체의 관심도,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 재정건전성 재고 여부

-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의 관심도 향상’ 항목의 경우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의 관심도가 높을수록 예산확보가 용이하고 사업추진이 빠름에 따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사업이 당초 계획과 전망대로 실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본 문항의 설문결과 1(이전과 같음) ~ 10(높아짐) 선택에서 이전과 같음에 가까운 1~4는 38.8이고 대체로 높아지거나(6)~높아짐(10)으로 응답한 비율은 46.1% 보통(5)이 14.3%로 나타남
  - 즉, 전환사업 담당 공무원들은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일 때보다 자체사업이 된 이후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의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
- ‘지방재정의 대응력 증대(환경변화 대응)’ 질문의 경우도 행정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사업의 당초 목적대로 추진 가능할지를 묻는 것임
  - 대체로 이전과 같음(1~4)이 35.8%, 대체로 높아지거나 높아짐(6~10)이 42.7%, 보통(5)이 20.13%로 나타남
  - 즉, 전환사업 담당공무원들은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방재정의 대응력이 이양 전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보았음
- ‘재정건전성 제고’의 항목의 경우 전환사업으로 운영했을 때 이양 전과 비교하여 안정적으로 예산확보가 가능하고 예산낭비 방지의 변화 부분에 대해 묻는 것으로서 대체로 이전과 같음
  - 즉, (1~4)이 43.1%로 나타났고, 대체로 높아짐(4~10)이 39.0%, 보통(5)이 16.9%로 나타나서 이양 전과 비슷 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표 1] 사업 이양 후 각종 변화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세부항목	1~4	5	6~10	무응답	합계
	이전과 같음	보통	높아짐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의 관심도 향상	59 38.31	22 14.29	71 46.10	2 1.30	154 100.00
지방재정 대응력 증대 (환경변화 대응)	54 35.06	31 20.13	66 42.86	3 1.95	154 100.00
재정건전성 제고 (안정적 예산확보 및 예산낭비 방지)	65 42.21	26 16.88	60 38.96	3 1.95	154 100.00

◆ 인식조사 결과(2): 주민만족도, 성과평가에 대한 인식

- ‘주민만족도 제고’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음
  - 대체로 주민만족도가 높아질것이다와 일부 사업은 주민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9% 이양 전과 같을것이다가 50.3%로 나타남
  - 즉, 이양 전과 비슷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더 많았음

● [표 2] 사업 이양 후 주민만족도 변화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응답수	비율
① 대체로 주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39	25.32
② 일부 사업은 주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다	21	13.64
③ 이양 전과 같다	77	50.00
④ 이양 전보다 주민만족도가 낮아질 것 같다	10	6.49
⑤ 기타	6	3.90
무응답	1	0.65

합계	154	100.00
----	-----	--------

- 전환사업의 성과평가가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다고 59.3%, 필요하지 않다고 35.3%로 나타나서 국고보조사업이 자체사업이 됨에 따라 성과평가가 필요하고 이를 다음 해의 사업추진에 환류해야 한다는 의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표 3] 전환사업의 성과평가 필요성

	응답수	비율
① 필요하다	89	57.79
② 필요하지 않다	53	34.42
③ 기타	10	6.49
무응답	2	1.30
합계	154	100.00

(단위 : 명, %)

◆ 인식조사 결과 통합

- 지자체 전환사업 담당 공무원들이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측정하는 질문에 보통(5)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반적으로 20% 가까운 것을 고려하면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 정도 질문 외에는 이양 전과 비슷하다보다는 높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결국 국고보조사업의 지방 이양 즉, 지자체의 자체사업이 되었을 때 재원만 동시에 이양된다면 지방재정의 책임성 확보가 더 양호한 환경임을 알 수 있음

○ 시사점

◆ 사업의 사후관로서 실질적 성과평가 필요

- 재정분권 전환사업들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사후 관리가 필수적일 것임
- 전환사업들의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사업 추진 후 성과평가가 실질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임
  - 실제로 지자체의 전환사업 담당자들은 국고보조사업이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되면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예산 집행사항 확인 등 우려, 사업관리 소홀, 사업관리 어려움, 사후 평가가 빈약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 전환사업 담당자들이 성과평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9.3%로서 낮지않음
  -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환사업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지만 성과평가마저 없으면 사업의 관리가 힘들어질 것 같고 컨트롤타워 부재로 자체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응답하였음

◆ 성과평가 체계 개선방향

- 성과평가와 관련해서는 현행 전환사업 운영기준 상의 성과평가 체계가 일부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우선 좀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지표 제시가 필요하고, 평가시에 시도나 시군구에 재량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서 단순한 집행실적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임
- 또한 전환사업의 평가는 재정보전금(전환사업 보전금) 일몰 후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주요재정사업 평가나 지방 보조사업 평가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알기쉬운 정책용어

딱 풀 이 딱 딱 한 정 책 용 어 풀 이

#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RCEP·알셈)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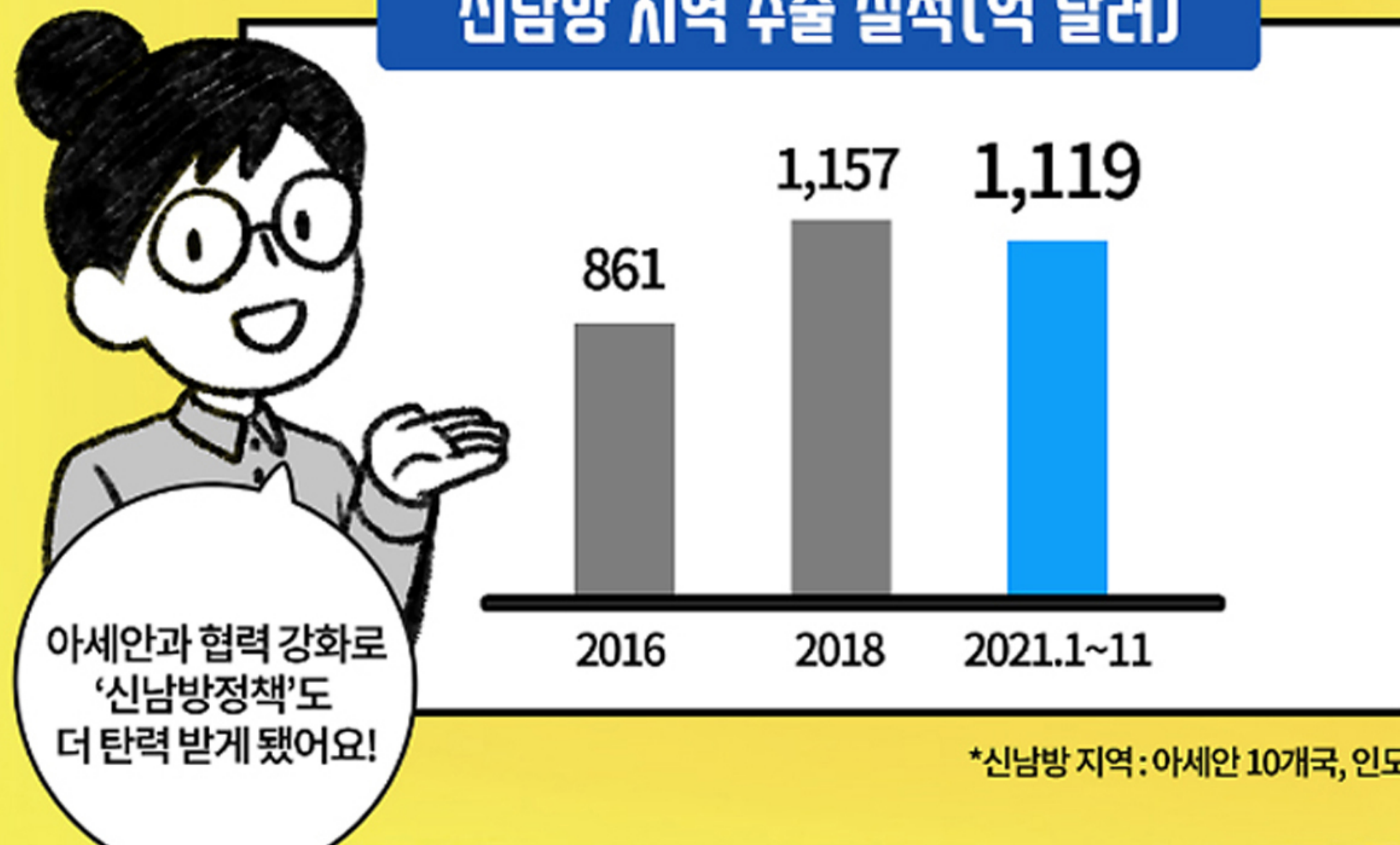
아시아·태평양 15개국 간 자유무역 협정이죠! 세계 최대 FTA예요

- GDP 합계 26조 달러
- 인구 22억 명
- 무역 비중 28%

## 기존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자동차·철강 등 상품 관세는 추가로 낮추고  
게임·콘텐츠 등 서비스 시장도 추가 개방,  
기업들 수출길이 더욱 넓어졌어요!

### 신남방 지역 수출 실적(억 달러)



알기쉬운 정책용어

**역내 통일된 규범 마련!**

부품 비율 등 나라마다 달랐던  
원산지 기준은 통일하고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규범을 마련해  
기업 편의성과 투자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명실상부 통상대국으로!**

2월 1일 발효된 RCEP은  
코로나19로 악화된 무역환경을 개선할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수출기업들이  
RCEP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